

尹체포 충돌 우려에...압박·회유 강은 양면전략

공수처, 경호처에 2차 경고 공문...차장 대신 6개 부서에 보내 "명령안 따라라도 직무유기 아냐" 직원들 설득...집행계획 구체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행 계획을 짜기 위해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동시에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다"라며 경호처 직원들을 설득하고 나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1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준비 상황에 대해 "집행계획을 더 세밀하게 짜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 인력 투입 방안 등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거나, 소총 기방으로 추정되는 배낭을 맨 경호처 직원들의

모습이 목격됐다는 언론 보도 등이 나오면서 물리적 충돌에 관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이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경호처 내부에선 법원이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관한 윤 대통령 측의 신중까지 각각한 상황에서 계속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경호처가 강경 저지에 나선다면 최악의 경우 경찰 등과 충돌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가 전날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도 공권력 간 유혈 충돌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고심의 결과물로 풀이된다.

공문에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민·



경호처에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 전달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경호처 관계자에게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성 내용이 담겼다.

다만 공수처는 "책임을 물겠다"는 식의 강경한 표현보다는 "민·형사상 책임,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

를 수 있다" 등의 완곡한 표현을 썼다. 공문에는 담지 않았지만 "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

호처 직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공수처가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달 공문은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

에게 보냈는데 이번에는 차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아닌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경호지원본부,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경호안전교육원 등 6개 부서장에게 직접 보내는 방식을 취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놓고 강경파로 알려진 김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과 나머지 간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해 경호처의 '단일대응'을 흐트러뜨리려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경호처 직원들에게도 별도의 메시지를 발송해 지휘부와 일선 직원, 지휘부 사이를 나눠 공략하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은 이본부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해 특수공무방해 피의자로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이본부장은 이번 3차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신 경호처 기동부에게도 14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요구를 보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앞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의 체포영장 신청·발부 상황을 우선 지켜본 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 표결처리

대법원장이 특검후보 추천권 가져...'비토권' 제외 국힘 '외환 혐의' 포함에 "정치공세적" 반발 퇴장 민주 "비상계엄 관련 외환 혐의...당연히 포함돼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표결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특검법에는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

은 제외됐다. 늦어도 16일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특검법은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또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이는 야당이 애초 발의한 원안에는 없었으나 지난 10일 소위원회 의결 당시 야당의 주도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치 공세적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우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적 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1년간의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수사하지는 것이 자의적 행위야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외환 혐의 조항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한정적 문구가 붙어 있어 (수사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반박

했다. 여야는 '특검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미진할 때 보충적·예외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는 내용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사건이 중대하고 국민의 관심이 크다고 해서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공수처는 없어야 한다"며 "계엄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가 수집됐고 기소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특검을 하지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재태 법사위원장은 "내란 특검은 공정성도,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하루속히 이 사태의 종식이 안보와 국정 안정에 필요하므로 특검법이 조속히 실현되는 게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 집행 방해시 체포 시사

경찰청장 대행, 경찰특공대 투입엔 "국수본 인력 충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른바 '백골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모경중 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 저지 행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적극적으로 체포를 저지하면 현행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기현·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모여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육탄 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한 '백골단'을 출병해 논란을 빚은 '반공청년단'과 관련해서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 현행법이 될 수 있다며 체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강조하며 대통령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 체포 작전에 경찰특공대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국가수사본부가 요청해온 바 없다"며 "국수본도 충분한 자체 수사 인력이 있다"고 거리를 뒀다. /연합뉴스

경찰 "경호처 무력 사용시 적극 조치"

"안전 최우선尹 체포영장 집행"...현행법 체포·분산 호송 계획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인명 피해나 유혈사태 없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사직으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이 직무를 대행 중인 가운데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좋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자꾸 인명 피해 내지 유혈사태를 유도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

의에 출석해 "(경호처가) 무력을 사용해 방해하는 행위는 현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경호처가 경찰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경찰은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성공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영장 집행이 2·3일에 걸쳐 장기화할 가능성도 대비 중이다.

특히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법 체포한 뒤 복수의 경

찰사로 분산 호송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직원만큼은 선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경찰은 국회의원이더라도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이 명확하다면 현행법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에 함께 나서게 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조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날 입장을 내고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얼굴을 공개하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이재명, 강제집행 놓고 시각차

崔 "불상사 안돼" vs 李 "저항한다고 안 잡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강제집행 문제를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최 권한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지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하자, "법인 잡는 데 '저항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와 비슷한 얘기인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경제는 불안정이 가장 큰 적 아닌가.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텐데,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며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민생 경제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 협의를 활발하게 해주길 기대한다"며 "민생 경제를 위해 올해 예산의 40%를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尹측 "공정 어렵다"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예단·우리법연구회장 경력·배우자와 국회 대리인 관계 등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3일 기피 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

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덧붙였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 당사자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론하기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동일한 사건에 2명 이상을 기피할 수는 없다.

헌재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현재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다만 현재 관계자는 14일 예정된 변론기일은 그대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2017년 2월 22일 변론 도중 대리인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 현재는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며 곧바로 각하한 바 있다. /연합뉴스